



이현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농업, 2·3차 산업화 하려면

농민 직접 유통·가공 쉽지 않아

우리 농업을 2·3차 산업화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는 일견 맞다고 할 수 있다. 생산 단계에서 올릴 수 있는 소득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가공과 유통 단계의 부가가치를 농민의 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나 가공 유통의 부가가치를 농민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직접 2·3차 유통 가공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경영체를 소유하거나, 그런 사업을 잘 하는 경영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업 내지 동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사업에 따르는 위험 부담 없이 부가가치

만을 농민이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단계의 부가가치를 농민의 소득으로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예상되는 문제는, 직접 유통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의 숫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농민들은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직접 2·3차 유통 가공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농민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 농민들은 가공을 하고, 직판을 하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단순히 보건위생 당국의 규제 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

한 시설의 설치와 기술지원을 받기도 어렵지만 파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농협에 무작정 맡기는 것은 위험

둘째, 대다수의 보통농민을 위해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유통 가공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다. 영세한 농민들로 하여금 투자자금을 내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설사 유통 가공사업체를 세운다 하더라도 농민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업체를 몇 개나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 농산업계는 창의성과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 경영인과 인력이 많지 않다.

결국 농협이 나서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농협은 이념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농민의 것이며, 그래도 '훈련된' 사람(경제사업 담당 임직원만 2만 3천명)과 '조 단위' 가용 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사업은 적자'라며 손사래 치는 농협을 '농민을 위해 돈을 버는, 농민의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셋째, 경쟁력 있는 민간 유통 가공업체

와 계열화를 하거나, 계약생산+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농가가 유통가공의 부가가치를 차지하기가 어렵다.

'식품산업체'를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정책자금을 조금 지원한다고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차지할 수 없다. 농민이 우월한 입장 내지 대등한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형유통업체나 계열화업체의 '횡포'를 성토하면서도 농민끼리 조합끼리 제살 깎아먹기에 바쁘다.

세밀한 기준·지원체계 확립을

농업의 2·3차 산업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단순히 98만개나 되는 식품산업체의 일부 경영체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농업의 2·3차 산업화라고 할 수 없다. 농가의 불편을 덜면서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세밀한 시설·위생기준과 지도·지원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농협의 경제사업 의지와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생산자들의 진정한 협동정신을 드높이는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피해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